경제분석

2026년 11월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 점검



Economist

하건형

☎ (02) 3772-1946

✉ keonhyeong.ha@shinhan.com

문서현

☎ (02) 3772-2640

✉ seoh.moon@shinhan.com

블루 웨이브에도 신규 입법은 제한적

민주당이 상원 54석, 하원 253석 이상을 확보했지만 거부권 재의결에는 상원 13석, 하원 37석이 모자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신규 재정 입법이 제한되면 재정과 투자는 현행법의 시한을 따른다. 반도체 공제(48D)는 2026년 말, 한시 감세는 2028년 말 끝난다. 2027년에는 시한을 앞두고 당겨진 투자의 착공 공백과 감세 연장 및 오바마케어(ACA) 복원 협상이 남는다.

앞당겨진 X-Date와 전후 유동성 환경 변화

부채한도 여유는 7,540억달러로 2027년 1분기 순차입 계획보다 작다. 부채한도는 2027년 봄에 도달하고 X-Date(재무부 보유 현금 고갈에 따른 재정 활동 중단 시기)는 4분기 중 예상된다. 2027년 신규 의회 개원 전 공화당 주도의 부채한도 상향은 내부 반대로 어렵다. X-Date 대치 경로(확률 60%)에서는 재무부일반계정(TGA) 0.85조달러가 6개월 간 풀린다. 지급준비금매입(RMP) 초기 속도의 3배를 상회하나 부채한도 증액 후 3~4개월 안에 회수되는 일시 공급이다.

정치 일정이 키울 금리, 환율 변동성

정치 일정은 2027년 금리와 환율의 굴곡을 만든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재정 꼬리위험이 약화되며 국채 10년 금리는 선거 전보다 10bp 가까이 낮아졌다. 부채한도는 단기금리와 외화자금시장을 흔든다. 부채한도에 도달한 2~3분기에는 단기금리 하락과 스왑포인트 역마진 축소가 예상된다. 4분기 X-Date 직전 변동성 확대 후 2028년 1분기 되돌림이 전망된다. 방향은 연준이 정하겠다. 고용 서프라이즈에 달러가 선거 전 수준을 상회한 배경이다. 2010년 이후 X-Date 직전까지 간 다섯 차례 가운데 지준과 긴축 환경이 가장 비슷한 2023년을 참고할 만하다.

정책 수단별 입법 가능 범위

수단	의결 요건	민주당 의회 하
일반 법안(증세/복지 확대)	하원 과반, 상원 60표, 대통령 서명	상원 60석 미달로 막힘
예산조정법(세입·세출·부채한도)	양원 과반, 필리버스터 면제	양원 통과 가능, 거부권에 막힘
거부권 재의결	양원 3분의 2(상원 67, 하원 290)	불가
세출·부채한도	양원 통과, 대통령 서명	민주당 동의 필수
장관/판사/연준 이사 인준	상원 과반	인준 거부 가능
조사/소환/탄핵소추	하원 과반	가능
관세(301/232조)	행정부 재량	제한 법안은 거부권에 막힘

자료: 미 헌법, 상원 및 하원 의사규칙,신한투자증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 점검

블루 웨이브에도 정책 방향성 변화보다 모멘텀 약화

민주당 다수당 지위 확보, 신규 입법보다 견제 강화

금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11월 6일 기준 상원 54석, 하원 253석 확보했으며 상원 2석, 하원 27석 미확정) 2027년 1월 3일부터 미국은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 체제로 바뀐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과 심의의 주도권을 얻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상원 일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넘을 60표가 필요하다. 양원 과반만으로 가능한 예산조정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힌다. 거부권 재의결에는 상원 67석, 하원 290석이 필요하다. 금번 선거 결과로는 일부 공화당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 의회 영향력은 신규 입법보다 기존 법의 연장을 거부하고 예산과 인준을 견제하는 쪽에 가깝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선례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하자 행정부는 122조로 관세를 재부과했다. 다만 150일 시한을 넘기는 연장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세는 7월 24일 만료돼 301조 관세로 대체됐다.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301조, 232조 관세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 재량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재정 꼬리위험 약화로 받아들였다.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하면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4.8%대로 하락해 9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 역시 9월 30일 이후 최저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공약은 시장이 재정 악화의 꼬리위험으로 평가했으나 해당 위험이 사라졌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정책 수단별 입법 가능 범위

구분	민주당 확보	재의결 요건	필리버스터	특이사항
상원	54	67	60	2석 미확정
하원	253	290		27석 미확정

수단	의결 요건	민주당 의회 하
일반 법안(증세/복지감세)	하원 과반, 상원 60표, 대통령 서명	상원 60석 미달로 막힘
예산조정법(세입·세출·부채한도)	양원 과반, 필리버스터 면제	양원 통과 가능, 거부권에 막힘
거부권 재의결	양원 3분의 2(상원 67, 하원 290)	불가
세출·부채한도	양원 통과, 대통령 서명	민주당 동의 필수
장관/판사/연준 이사 인준	상원 과반	인준 거부 가능
조사/소환/탄핵소추	하원 과반	가능
관세(301/232조)	행정부 재량	제한 법안은 거부권에 막힘

자료: 미 헌법, 상원 및 하원 의사규칙, 신한투자증권

2027년 의회 개원 전까지 공화당 주도 정책 발의 변수

공화당 내 이견 속
레임덕 입법 난항.
국채 공급 부담은 잔존

2027년 1월 3일 신규 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기존 의회에서의 입법 여부에 따라 정책 경로가 달라진다. 민주당이 양원을 가져갔지만 신규 의회 개원까지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레임덕 회기로 불리는 이 기간은 11월 9일 시작해 12월 11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 세출, 국방수권법, 농업법, 보건 프로그램 연장, 보건복지부 인사 인준이 해당 기간에 몰려 있다.

해당 시기 예산조정 방식을 통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 이후 공화당 지도부 균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의장직에 재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하원 공화당은 11월 10일 신임 지도부를 선임한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1월부터 소수당 대표가 된다. 지도부가 교체되는 와중에 당론을 모아 단독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레임덕 회기 동안 부채한도 선제 상향 가능성이 낮아졌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임기 말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화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방식이다. 다만 당내 반대가 분명하다. 일부 공화당 상하원 위원은 지출 삭감과 동반된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한다.

국방 예산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부는 사상 최대인 1.5조달러 국방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이다. 부채한도와 국방 예산 증액이 신규 법안으로 통과되면 재정 적자 축소는 제한된 채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 보건 관련 입법 역시 금번 회기에 처리되려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

2027년 1월 3일 신규 의회 개원까지 주요 일정과 쟁점

시점	일정	쟁점
2026/11/09	레임덕 회기 개시	세출/국방수권법/농업법
2026/12/11	임시예산(P.L.119-103) 만료	옴니버스 또는 추가 임시예산, 보건 패키지 연계
2026/12 중	부채한도 예산조정 검토	공화당 단독 처리 가능, 하원 결속 필요
2026/12/31	48D 착공 시한, 보건 프로그램 만료	세제/보건 연장 여부
2027/01/03	새 의회 개원	민주당 양원 다수

자료: 신한투자증권

정책 일몰 조항에 따른 재정과 투자 모멘텀 점검

신규 정책 변화 제한 속 관세 환급과 세제 시한이 재정과 투자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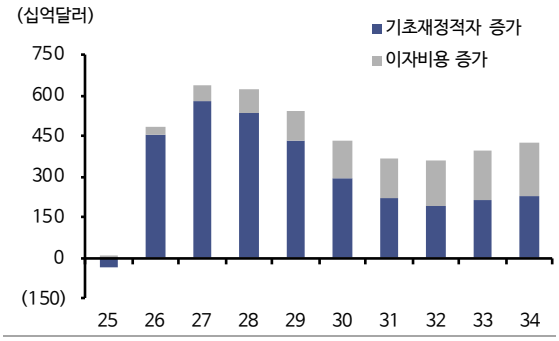
신규 입법을 통한 정책 변화가 제한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의 일몰로 인한 영향력을 점검해야 한다. 2027년 재정정책 규모 변화는 크지 않다. OBBBA가 2025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TCJA 개인소득세율과 표준공제 확대를 영구화해 2027년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대형 감세는 없다.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99조달러로 전년대비 2,170억달러 늘었다. GDP 대비 6.1%다. 적자 확대를 이끈 것은 신규 입법이 아닌 이미 정해진 지출에 따른 결과다. 2027년도 같은 구조다. 이미 종료된 조항은 협상 카드로 남는다. 관세 환급은 세입 공백을 야기하고 다가오는 세제 시한은 투자 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협상 카드로 남은 대표 조항은 ACA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다. 2025년 말 만료된 뒤 하원은 2026년 1월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원 첫 의제로 ACA 복원을 예고했고 모든 예산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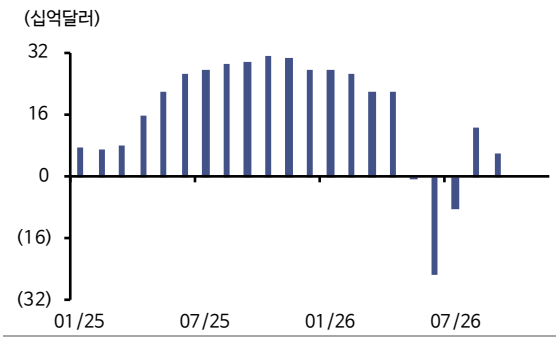
관세 환급에 따른 공백을 고려해야 한다. 2026 회계연도 관세 세입은 1,732억달러로 작년(1,949억달러)대비 11% 감소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월평균 270억달러 관세 순세입이었으나 5월 환급 시작 이후 9월까지 월평균 -31억달러로 전환됐다. 환급 대상 1,660억달러 중 약 1,300억달러가 2026 회계연도에 지급됐고 360억달러 내외가 금년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OBBBA에 따른 재정적자 추정 규모



자료: CBO, 신한투자증권

미국 관세 순세입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세입 공백이 재정의 시계를 당긴다면 세제 시한은 투자의 시계를 당긴다. OBBBA는 산업 지원 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새로 만들면서 착공·가동 시한은 앞당기거나 그대로 뒀다. 시한 직전에 착공이 몰리고 시한 이후에는 신규 착공이 끊기는 구조다. 2026년 말 반도체, 2027년 말 신재생, 2028년 말 공장 건물 순으로 시한이 이어진다.

세제 시한별 영향:
① 2026년 말 반도체
② 2027년 말 신재생
③ 2028년 말 개인 감세

먼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다. OBBBA로 공제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됐으나 착공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공장 건설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컴퓨터, 전자, 전기 제조업 건설지출은 2026년 8월 연율 523억달러로 2024년 6월 고점(1,264억달러) 대비 60% 줄었다. 48D 시한은 남은 프로젝트 착공을 4분기 중으로 당기는 데 그칠 전망이다. 착공은 총비용 5% 지출만으로 인정돼 공장 건설보다 장비 선발주 및 기업 공시에 먼저 나타나겠다. 2028년 말 착공분까지 유지되는 공장 건물 즉시상각이 투자 절벽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

반도체 다음은 2027년 말 신재생이다. 2026년 7월 5일 이후 착공한 풍력 및 태양광은 2027년 말까지 가동해야 공제를 받는다. 착공 앞당김은 상반기에 이미 마무리됐다. 7월 4일 이전 착공분은 2030년까지 가동이 가능해 설치 물량이 분산된다. 2028년부터 신규 착공 파이프라인이 문제다. 반도체와 신재생 모두 세제 시한으로 투자가 앞당겨진 다음 2027년부터 신규 착공 공백기에 접어든다.

재정 변화가 큰 정책 소멸은 2028년 말에 집중된다. 팁 및 초과근무 공제,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65세 이상 추가공제가 이때 종료된다. 4개 조항의 비용은 총 2,460억달러로 대선 직전 감세가 사라지는 구조다. 해당 구조상 공화당은 연장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연간 270억달러 규모의 ACA 복원을 맞교환 조건으로 내걸 전망이다.

맞교환 협상이 성사되면 감세 연장분과 ACA 복원분이 더해져 재정적자는 연간 900억달러(GDP 대비 0.3%) 확대된다. 감세 연장분은 2029년부터 반영되고 2027년 중 영향을 주는 것은 ACA 복원분 연 270억달러다. 결렬되면 2029년부터 세수가 늘지만 2027년 재정 변화는 없다. 2027년 금융시장은 재정 규모 변화보다 협상 시점에 관심을 줄 전망이다. 협상 논의는 2028 회계연도 세출이 시작되는 10월과 부채한도 협상이 몰리는 하반기에 겹칠 것으로 판단된다.

만료 조항 일정과 재정 규모

구분	조항	시점	규모	2027년 시사점
이미 만료	ACA 강화 세액공제	2025/12/31	3년 복원 시 806억 달러	민주당 의회 협상 1순위
진행 중	IEEPA 관세 환급	2026/05~	1,660억달러 중 약 1,300억달러 지급	잔여분 FY2027초 지급
2026년 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48D, 35%)	2026/12/31 착공	투자 발표 6,400억달러	4분기 착공 집중, 연장은 레임덕 회기
2027년 말	풍력·태양광 (7/5 이후 착공분)	2027/12/31 가동	2026~27년 태양광 69GW, 풍력19GW	신규 파이프라인 축소
2028년 말	팁/초과근무/자동차 이자/고령자 공제	2028 과세연도	4개 합계 2,460억달러	대선 전 연장 협상, ACA와 맞교환
2028년 말	공장 건물 즉시상각(QPP)	2028/12/31 착공	미산정	48D 절벽 일부 완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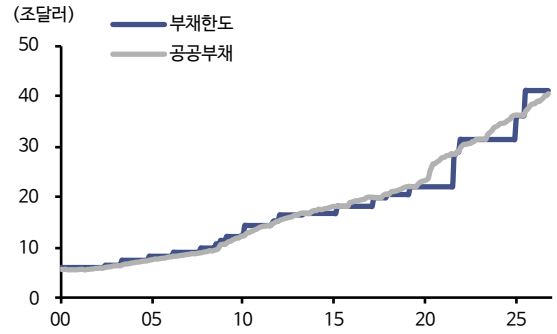
자료: 백악관, 신한투자증권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별 유동성 환경

2027년 1분기 말~2분기 → TGA 증감이 단기자금 및 유동성 환경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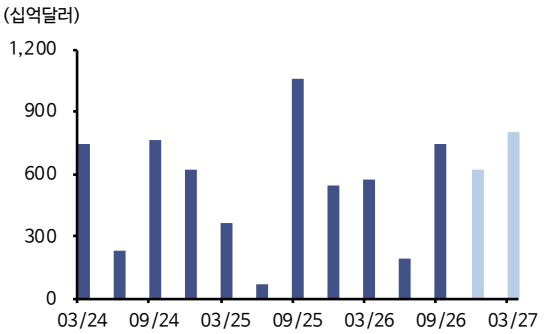
부채한도 시계가 당겨졌다. 11월 3일 공공부채 총액은 40.547조달러이고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부채를 빼면 한도 41.104조달러까지 남은 여유는 7,540억달러다. 재무부가 밝힌 2027년 1분기 민간 순차입 계획은 8,000억달러로 남은 여유보다 크다. 부채한도 도달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부채한도 도달 시점보다 해당 전후로 재무부일반계정을 통해 지준 등락과 함께 유동성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공공부채와 부채 한도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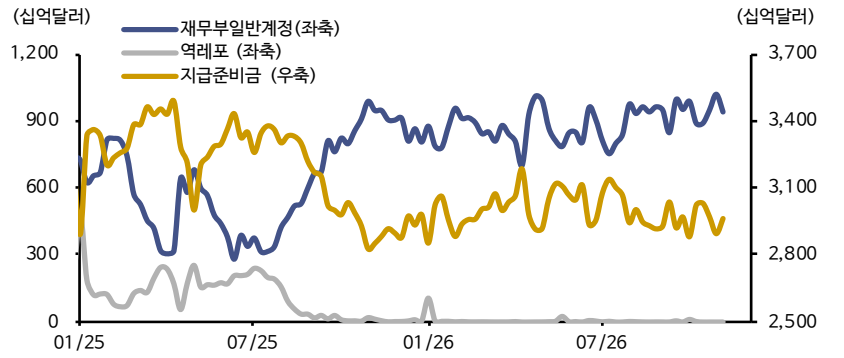
미국 정부 민간 순차입 규모



자료: 미 재무부, 신한투자증권

직전 부채한도 도달 국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었다. 2025년 1월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특별조치에 들어가 재무부일반계정(TGA)에 쌓인 현금을 소진했다. TGA 통한 현금 유입에 지준은 6월 초 3.4조달러까지 늘었다. 다만 2025년 7월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단기 금융시장 긴축이 나타났다. 연준이 12월 QT 종료 및 월 400억달러 규모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단기 유동성 환경은 타이트하다. 지준은 3조달러 초반이다. 역레포 잔고는 사실상 소진됐다. 재무부일반계정(TGA)의 증감에 따라 지준이 움직이는 구조다. 부채한도 경로가 2027년 단기자금시장 방향과 함께 유동성 환경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일반계정과 역레포, 지급준비금



자료:,CEIC, 신한투자증권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

(A) 연내 상향(30%)
→ 국채 공급 확대

(B) 도달 전 합의(10%)
→ 유동성 영향 제한

(C) X-Date 대치(60%)
→ 유동성 공급 후 급격한 회수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는 3가지다. 먼저, 2027년 신규 의회 개원 이전 레임덕 회기에서 상향(A) 가능성을 30%로 본다. 부채한도 도달 전 해소(B) 10%, X-Date 대치(C) 60%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 분열 상황에서 레임덕 회기 내 공화당 의견 합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채한도와 연계한 요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 부채한도 도달 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년 말까지 부채한도 상향 시 유동성은 중립이지만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 레임덕 회기에 한도가 오르면 TGA는 0.85조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재무부는 정상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방 예산 증액이 동반될 경우 늘어난 적자만큼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 재무부는 11월 국채 발행 계획에서 입찰 규모 유지 문구의 "최소한"을 삭제해 2027년 초 이표채 증액 여지를 남겼다. 지준이 3.0조달러 부근에 머무는 가운데 단기국채 공급이 늘면 레포 금리 상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2027년 민주당 의회에서 부채한도 도달 전 협상이 이뤄질 경우 유동성 영향이 가장 작다. 신규 의회가 1분기 세출 협상과 부채한도를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경우다. 부채한도 폐지나 장기 유예로 결론나면 TGA는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부채한도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다.

X-Date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대치 국면에 들어설 경우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회수가 나타난다. 1~2분기 부채한도 도달 이후 TGA는 월평균 1,4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RMP 초기 속도(월 400억달러)의 3배로 지준은 3조달러 초반에서 4조달러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2~3분기 단기자금시장은 2025년 상반기 이후 가장 넉넉해진다. 문제는 공급된 유동성이 X-Date 이후 회수될 때다. 2023년에는 2조달러를 상회하던 역레포가 일부를 흡수했으나 지금은 지준에서 그대로 빠져나간다. 단기 자금시장에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 있다.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별 정책 일정 경로

시점	A. 레임덕 상향(30%)	B. 도달 전 해소 (10%)	C. X-date 대치(60%)
2026.11 ~12	예산조정으로 한도 상향, 국방 증액 동반 가능	12/11 세출만 처리	12/11 세출만 처리
2027.1Q	국채 정상 발행, 국방 증액분 공급 증가	민주당 의회, ACA 연계 협상	3월 한도 근접
2027.2Q	TGA 0.85조달러 유지	5월 전 합의	5월 도달, 특별조치 개시
2027.3Q	영향 없음	TGA 정상	TGA 감소, 단기국채 순상환
2027.4Q	FY28 세출만 쟁점	FY28 세출만 쟁점	FY28 세출·X-date 겹침, 셧다운 리스크
2028.1Q	영향 없음	영향 없음	2월 X-date, 단기물 왜곡
2028.2Q	영향 없음	영향 없음	TGA 재건, 지준 0.85조달러 회수
유동성	중립	중립	2H27 공급, 1H28 회수
금리	국방 증액 시 기간 프리미엄 상방	중립	2H27 단기물 하락, 1H28 단기물 상승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채권 및 외환시장 시사점

장기금리 → 부채한도 경로별 국채 공급이 좌우

선거 이후 단기 금융시장 가격 흐름은 제각기 달랐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선거 전보다 10bp 가까이 낮게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다르다. 선거 직후 101p 초반까지 하락했던 달러화지수는 고용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자 102p 초반으로 반등해 선거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 국채 2년 금리 역시 선거 이전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선거는 기간 프리미엄을 낮췄지만 달러와 단기금리는 경제지표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

단기금리 → 수준은 연준, 등락은 부채한도가 결정

장기금리 방향은 부채한도 경로별 국채 공급에 좌우된다. 부채한도 도달 전 민주당 의회와 행정부 간 합의로 재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장기물에 가장 우호적이다. 레임덕 회기 동안 부채한도가 확대되면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이표채 공급이 금리 하락을 제한한다. X-Date까지 대치하게 되면 이표채 발행이 유지돼 직접 영향이 작지만 4분기 X-Date 전후로 변동성이 커진다.

달러 → 연준 긴축 기조가 방향 결정, 부채한도 경로에 따라 단기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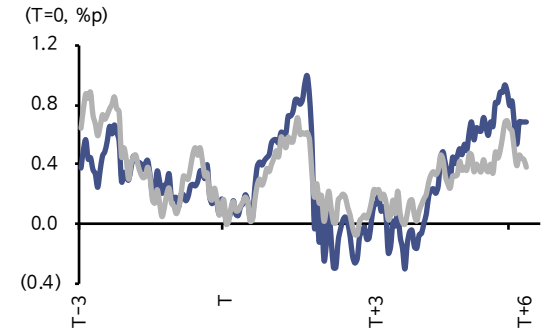
단기금리 수준은 연준이, 등락은 부채한도가 결정한다. X-Date 대치 구간에서는 2~3분기 단기국채 순상환으로 단기물이 먼저 하락하는 불 스티프닝을 전망한다. 2028년 1분기 TGA 확충 구간에서 되돌릴 전망이다. 달러는 금리 차를 따른다. 연준 긴축이 이어지는 한 기조적 약세는 제한된다. 다만 X-Date 대치 구간에서는 2~3분기 지준 확대가 약세 요인, 4분기 위험회피가 강세 요인이다. 원화는 2~3분기 스왑포인트 역마진 축소와 강세 압력, 4분기 위험회피 약세가 예상된다.

부채한도 협상 경로별 외환 및 채권시장 영향

구분	A. 레임덕 상향	C. X-date 대치(2H27)	C. X-Date 대치(1H28)
미 장기금리	국방 증액 시 하락 제한	영향 작음	X-Date 전후 변동성 확대
미 단기금리	중립	하락	상승, 레포 변동성
커브	베어 스티프닝	스티프닝	플래트닝
달러	장기금리 상승에 지지	조달여건 완화로 약세	위험회피 강세
원화	중립	강세 압력	위험회피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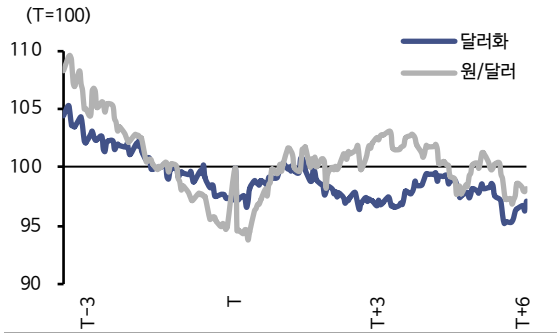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3년 부채한도 도달 전후 미국 장단기 금리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 주: T = 23.01.19

2023년 부채한도 도달 전후 달러화, 원/달러 환율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 주: T = 23.01.19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문서현).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